











- 제9차 규제 · 제도혁신 해커톤 -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

구 분	주 요 내 용
□ 쟁 점	<p>□ 개인정보 이동권의 본질과 목적</p> <p>□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보전송 요구권을 포함한 개인정보 이동권 규정의 필요성</p> <p>□ 개인정보 이동권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할 경우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p> <p>□ 개인정보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p>
□ 토론자간 합의사항	<p>□ 개인정보 이동권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주체를 위한 새로운 권리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한다. ○ 개인정보 이동권은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다운로드권**과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정보전송 요구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을 의미함 ** '다운로드권'에는 정보주체가 수령할 권리와 직접 제3자에게 전송할 권리를 포함함 ○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권리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원칙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전송 요구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도하에 각 산업별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동권 행사를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정보전송 요구권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둘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정보전송 요구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전송 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동권, 특히 정보전송 요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행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또는 부당하게 정보전송 요구권 행사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 부당한 전송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 또는 전송 정지·중단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및 국외이전에 관한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p>□ 정부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야에서도 개인정보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원활한 개인정보 이동을 위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데이터 호환성, 보안·인증 기술, 인프라 기술 등이 개발·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p>□ 후속조치 요구사항</p>	<p>□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토론자간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p> <p>□ 정부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제도 정비 및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p> <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실질적인 보장과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p>

□ 토 론 자 (11명)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네이버 이진규 이사	
	뱅크샐러드 이정운 변호사		코리아크레딧뷰로 이욱재 상무	
	삼성병원 신수용 교수		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 유소영 교수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김보라미 변호사	
	서울YMCA 한석현 팀장	